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2015년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법무변화 이야기**

2015년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모음

■ **정부3.0 이야기**

법무부 정부3.0 우수사례 모음

■ **정상화 이야기**

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 우수사례 모음

■ **규제개혁 이야기**

법무부 규제개혁 사례 모음





법무변화 이야기

2016.01.12(기증)

■ 2015년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모음

- 1 법무부-경찰 간 정보 공유 : 구인장 연계 시스템 구축 _7
- 2 부처간 협업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절감 _8
- 3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_9
- 4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서비스 실시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_10
- 5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 '위기 청소년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실시 _11
- 6 법무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_12
- 7 정신건강 미약수용자 심리치료를 위한 태권도 요법 시행 _13
- 8 소년원 면회장 이용의 편의성 제고 _14
- 9 기초학력 부진학생 1:1 맞춤형 개별학습지도 _15
- 10 지역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 _16
- 11 지역환경 개선 및 주민 친화를 위한 '벽화 그리기' _17
- 12 회복적 가정 기능 개선을 위한 '한마음 힐링 트레킹' 프로젝트 _18

정부 3.0 이야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 법무부 정부3.0 우수사례 모음

- 1 "민고 탁!" 말기는 기부, 공익신탁 _22
- 2 '스마트 접견'(화상접견3.0) 시대를 열다 _23
-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도입 _24
- 4 부처간 협업으로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_25
- 5 우리 마을 법률수호천사! 마을변호사 _26
- 6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한 방에 OK _27
- 7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활성화 _28
- 8 국민 맞춤형 형사사법3.0 제공 _29
- 9 통일법제 자료 한 곳에서 검색 _30
- 10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_31

정상화 이야기

■ 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 우수사례 모음

- 1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_36
- 2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_37
- 3 미납 추징금 환수 _38
- 4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_39
- 5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_40
- 6 검사비위로 인한 불법 수익 박탈 _41
- 7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_42
- 8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어 표출 _43

규제개혁 이야기

■ 법무부 규제개혁 사례 모음

1. 국민불편 해소

-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고용변동신고 한번으로 OK! _49
- 2 외국인도 국내교육기관에서 영어 등 외국어연수 허용! _50
- 3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 제도 폐지! 주민등록으로 개선 _51
- 4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장애인 등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및 심사절차 간소화 _52
- 5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 요건 중 부동산 평가 방법 개선 _53
- 6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우편으로 체류민원 접수! _54
- 7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_55

총목차 | Table of Contents

II. 기업활력 촉진

- 8 전문 외국인 번역사 고용관련 요건 완화 _56
- 9 외국인 여행상품 개발자 고용관련 요건 완화 _57
- 10 외국인 고용 허용비율 확대 _58
- 11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도모 _59
- 12 해외기술전문학교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허용 확대 _60
- 13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_61
- 14 APEC 기업인여행카드 발급요건 완화 _62
- 15 '경량항공기' 통한 자금유통(저당권의 대상물)으로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 _63

III.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16 유학생에 대한 영주(F-5)자격 취득 대상 확대 _64
- 17 유학생에 대한 취업(E-7) 및 구직(D-10)자격 취득 요건 완화 _65
- 18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F-5)자격 부여 점수제 도입 _66
- 19 점수이민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자격 변경시 체류기간 상한 확대 _67

IV. 관광활성화 기여

- 20 중국 및 동남아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 _68
- 21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_69
- 22 환승관광 무비자입국허가 제도 더욱 더 확대! _70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법무변화 이야기

2015년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모음



Table of Contents

2015년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리스트

- 1 법무부-경찰 간 정보 공유 : 구인장 연계 시스템 구축
- 2 부처간 협업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절감
- 3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 4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서비스 실시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 5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 '위기 청소년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실시
- 6 법무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7 정신건강 미약수용자 심리치료를 위한 태권도 요법 시행
- 8 소년원 면회장 이용의 편의성 제고
- 9 기초학력 부진학생 1:1 맞춤형 개별학습지도
- 10 지역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
- 11 지역환경 개선 및 주민 친화를 위한 '벽화 그리기'
- 12 회복적 가정 기능 개선을 위한 '한마음 힐링 트레킹' 프로젝트

01

법무부-경찰 간 정보 공유 : 구인장 연계 시스템 구축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02-2200-0334

개선 전

- 심야시간 또는 주말에 경찰에서 지명수배자 검거 시 구인장을 경찰에 송부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인근 경찰지구대 등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



개선 후

- 보호관찰정보시스템과 경찰청 사건수사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인장 정보를 '실시간 조회' 방식으로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
- 시간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영장 확보로 불법구금을 방지하고, 구인장의 실시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



02

부처간 협업을 통한 기초생활급여 절감

법무부 소년과 02-2110-3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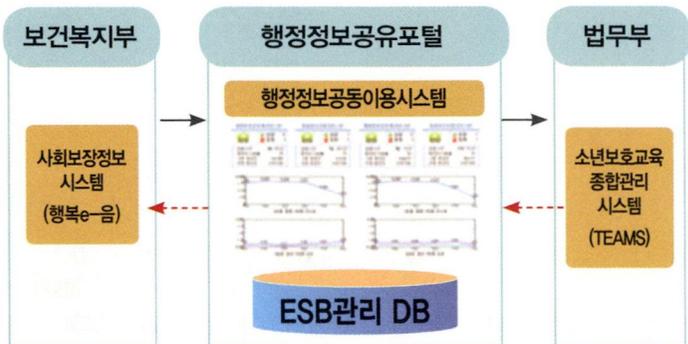
개선 전

- 소년원 입 · 출원자 정보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유가 되지 않음
- 소년원 입원 시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아 퇴원 후 부정 수급대상자로 통보되고 기초생활급여가 일시에 환수되는 경우 발생
- 이로 인해 소년원생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재비행 요인으로 작용



개선 후

- 국민기초생활비 수급대상자가 소년원 입원 시 자동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출원 시에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년원생 입 · 출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2015. 4.)
- 수급 중단 및 자격회복 지원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연 7억 8천만 원)
- 재비행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출원생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도움



03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법무부 사회복귀과 02-2110-3416

개선 전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족도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짧은 시간 일반 접견을 하게 되어 가족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곤란



개선 후

- 2015년 4월부터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 가구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이 차단시설이 없는 가족접견실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거동이 어려운 면회객에게는 교정위원·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



▲ 개선 전-일반 접견



▲ 개선 후-가족 접견



▲ 진주교도소



▲ 상주교도소

04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서비스 실시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법무부 보안과 02-2110-3383

개선 전

- 교정시설은 연간 380만 명의 접견 민원인이 방문하나 보안관련 문제로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민원인이 인터넷검색 또는 유선문의의 해야하는 등 방문 불편



개선 후

- 민원인의 기관방문 편의성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서비스 실시('15. 6. 15.)
 -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비게이션에서 교정시설의 위치를 인근 교차로로 간접 노출하고, 그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
- ※ 예시 : 교정기관명 검색 시 '○○교도소 앞 사거리'로 표출



▲ 올레내비



▲ 아이나비

05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 ‘위기 청소년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실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053-230-7110

개선 전

- 위기 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이 가능한 사회 전반적인 종합적 관리 체계 부재와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개선 후

-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4개 지역 보호관찰소와 사회복지관에서 보호관찰 전문처우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및 이타행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
- 지역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담, 검정고시 무료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보호관찰소 · 지역복지관 MOU 체결식



▲ 프로그램 실시

06

법무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031-482-6316

개선 전

- 인근 학생들의 법무공직에 대한 꿈과 적성 발견 등을 위한 맞춤형 직업 체험 프로그램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인프라 부족



개선 후

- 법무직업 체험프로그램인 「J-Dream Road」 개발·보급
- 법무직업 체험을 통해 법무공직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 문제유형별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법의식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수사기관 직무체험을 위한 체포·미란다원칙 고지, 영상녹화실 및 보호기관 직무체험을 위한 전자발찌 실습, 상담·교수연습실 등 체험장 조성



▲ 수사체험



▲ 모의재판



▲ 보호기관체험

07

정신건강 미약수용자 심리치료를 위한 태권도 요법 시행

천안교도소 041-567-3461

개선 전

-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이 미약한 수용자의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가 부족하고, 투약에만 의존할 우려



개선 후

- 2015년 단국대학교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활동적인 움직임과 수양, 예절교육을 갖춘 태권도를 치료요법에 도입·운영
- 명상의 시간을 통해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 수련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



08

소년원 면회장 이용의 편의성 제공

부산소년원 051-515-6565

개선 전



- 소년원 면회장까지의 경사로로 인하여 노약자 등 면회객들의 기관방문이 불편
- 면회객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마땅히 휴식을 취할만한 공간이 부족

개선 후

- 부산시 금정구 마을버사회사와 협의하여 면회시간에 맞추어 마을버스가 정문안내실을 통과하여 면회장 앞까지 운행토록 함으로써 기관방문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면회장 외부 테라스를 설치하여 면회객의 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면회객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휴식 공간을 제공



09

기초학력 부진학생 1:1 맞춤형 개별학습지도

안양소년원 031-473-3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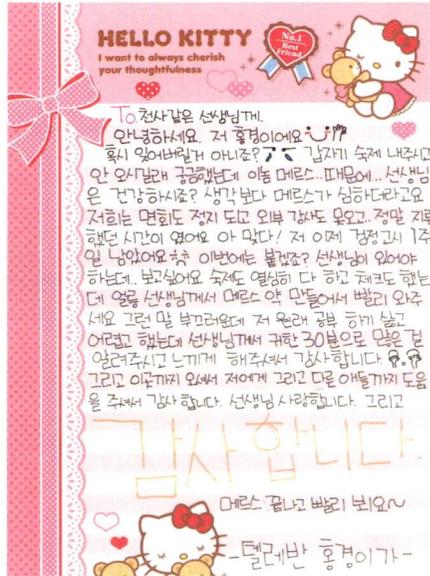
개선 전

- 기초학력 부진으로 검정고시·학과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일부 발생하여 개별·추가적인 학습지도가 필요



개선 후

- '15. 3. 피부미용반을 시작으로 현재 텔레마케팅반, 중등반, 헤어디자인반 등 4개 공과에서 자원봉사자 7명이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1:1 수준별 맞춤 개별학습지도를 실시, 확대 시행 예정
-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진로·고민상담 등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용안정에 도움



학생의 감사편지 일부 ▶

10

지역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사랑의 집수리”사업

■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033-737-8900

개선 전



-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독거노인/장애인/문맹인 등의 국민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회봉사 신청의 어려움
- 집수리지원 등에 필요한 지역자원이 부족하고, 2013년 청사 이전 반대로 인해 지역사회와 갈등이 남음

개선 후

- 지역 주민센터, 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및 민간봉사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대리신청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개선
-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26,575,150원을 투자하여 총 36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
- 보호관찰소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 개선



11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친화를 위한 '벽화그리기'

대구보호관찰소 053-950-1100

개선 전

- 보호관찰소 인근 초등학교 뒤편 담장이 낡고 어두운 시멘트 옹벽으로 되어 있어, 등·하교 길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었으며, 주변 환경과도 부조화



개선 후

- 계명대 학생들과 함께 담장에 두 가지 테마[동화 속 하늘나라, 몬드리안기법 컬러블록]의 벽화를 그림으로써 어둡고 음침하던 공간을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안전지대로 탈바꿈
- KT에서 벽화 담장을 따라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에서도 참여
- 이후에도 주변 공한지를 코스모스 밭으로 조성하고, 공한지 옆 담장에도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환경 개선에 노력



▲ 벽화 작업 전



▲ 벽화 완성 후 1



▲ 벽화 완성 후 2

12

회복적 가정 기능 개선을 위한 '한마음 힐링 트레킹' 프로젝트

전주소년원 063-272-3741

개선 전

- 소년원생은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 단절과 장기간 폐쇄적인 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해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개선 후

- 학생, 부모, 교사, 멘토가 함께하는 트레킹 체험활동을 통해 가정 기능 회복과 정서순화에 도움
- 부모님과 함께 식사 준비 및 텐트 야영,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한 멘토링, 트레킹 체험 소감 발표 등을 통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정부 3.0 이야기

법무부 정부3.0 우수사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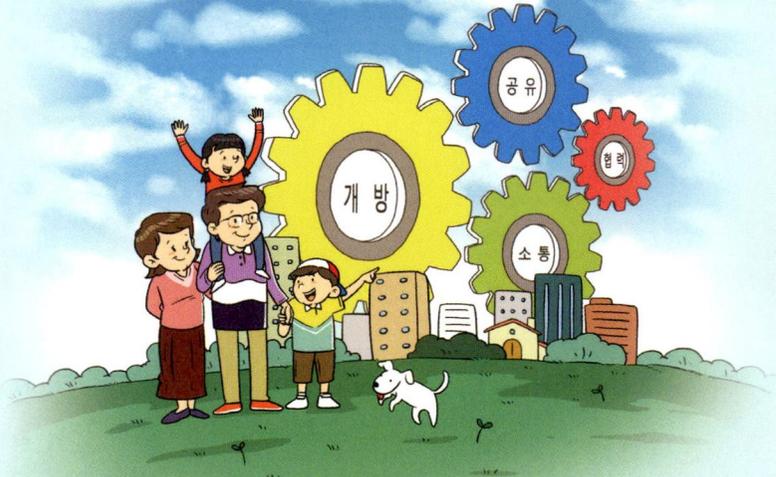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정부3.0 우수사례 리스트

- 1 “믿고 탁!” 맡기는 기부, 공익신탁
- 2 ‘스마트 접견’(화상접견3.0) 시대를 열다
-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도입
- 4 부처간 협업으로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 5 우리 마을 법률수호천사! 마을변호사
- 6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한 방에 OK
- 7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활성화
- 8 국민 맞춤형 형사사법3.0 제공
- 9 통일법제 자료 한 곳에서 검색
- 10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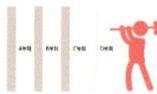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01 “믿고 탁!” 맡기는 기부, 공익신탁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그 동안은

•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기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기부 문화가 폭넓게 정착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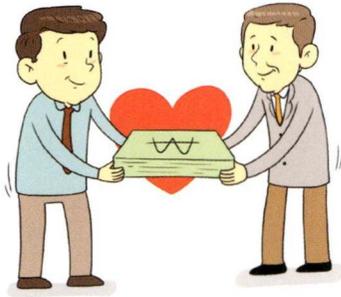
* '14년 영국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의 세계기부지수 평가 결과 147개국 중 60위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 후 법무부의 인가를 받으면 공익신탁을 설립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하게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공익신탁 공시사이트(trust.go.kr)에 공익신탁 운영 현황이 공시되고, 신탁관리인, 외부감사인 및 법무부가 관리·감독하므로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보장됨

* 공익신탁 제도 : 금전과 같은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하도록 해서 그 수익과 원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02 스마트 접견(화상접견3.0) 시대를 열다

법무부 보안과 (02-2110-3382)

그 동안은

- 민원인이 수용자와 접견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화상접견을 하거나 가정용 PC가 설치된 곳에서만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능하여 장소적 제한이 있었음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가족 등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용자와 영상으로 접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15. 8.)
- * 「스마트 접견」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신적인 접견 방식임



03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도입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476)

그 동안은

- 범죄자에게 피의자 권리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및 정보제공은 임의적으로 시행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졌음



- * 연간 범죄피해자는 약 200만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받은 범죄피해자는 연평균 6만명에 불과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및 정보제공을 의무화함(15. 4.)

※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주요내용

- ① 형사절차 참여 및 법률적 지원 안내 : 재판출석진술권, 형사절차 진행 정보, 법률상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등 안내
- ② 범죄피해자 경제적·의료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및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간병비 등 경제적·의료적 지원 정보 안내
- ③ 신변보호 지원 : 수사 및 법정동행, 보호시설 입소, 이사비 지원 등 안내



04 부처간 협업으로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9)

그 동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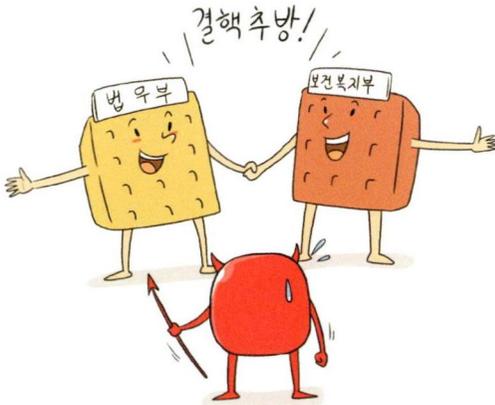
-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8배 이상 증가하였고,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의 상당수가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난치성 결핵을 보유하고 있었음
- *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는 4만 5천명이고, 이 중 2천 2백명이 결핵으로 사망함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법무부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들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함('16년 시행 예정)
- 또한, 국내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완치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 체류 관리를 강화함
- * 출입국관리사무소 - 보건소 - 국립결핵병원 간 협업을 통한 결핵관리 체계 구축



05 우리마을 법률수호천사! 마을변호사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

그 동안은

- 변호사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법률복지 취약 지역의 마을 주민은 간단한 법률상담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음

* '14. 12. 기준 전체 개업 변호사의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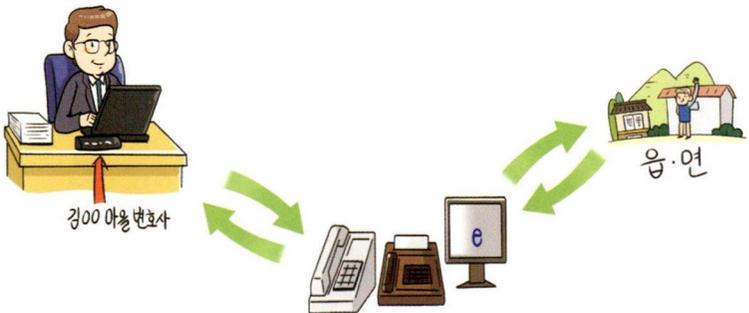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법률복지로부터 소외되었던 모든 주민들은 언제든지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네이버에 '마을변호사'를 검색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음

* 마을변호사 제도 :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마을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하여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3. 6. 시행)



06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한 방에 OK!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9)

그 동안은

- 외국인근로자 해고(고용주), 취업개시(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시 법무부·고용부 중 어느 한 곳에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양쪽에 모두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함('14. 6.)
- 취업개시신고 간소화, 외국인 성명표기방식 일치 등 부처간 중복관리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함



07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활성화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02-2110-4265)

그 동안은

- 주거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슬럼화지역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공간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발생률도 높아 지역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이 높았음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민·관이 함께 전국 14개 범죄취약지역을 선정,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CCTV, 보안등 설치, 벽화그리기 등 지역 내 범죄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셉테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14년)
- 2015년에는 강력범죄 발생지, 외국인범죄 발생지 등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임

* 셉테드(CPTED) :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주민불안감을 감소시켜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08 국민 맞춤형 형사사법3.0 제공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02-2110-3934)

그 동안은

- 내 사건을 조회하거나 민원신청하려면 하나의 사건임에도 5개 기관(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법원)에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이용절차가 불편하였음



* 기관별 IT시스템이 각자 따로 운영되어 사건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정보도 별도 제공되었음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기관간 시스템을 연계·공유하여 형사사법 정보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함
- 국민들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내 사건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음(‘13. 6.)



09 통일법제 자료 한 곳에서 검색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32)

그 동안은

- 통일법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가 각자 따로 관리하는 통일법제 DB시스템을 개별 접속하여 제한된 자료만 검색되었음



- * 기관별로 DB시스템을 별개로 운영하여 시스템 관리비용이 중복되고, 연구성과 공유도 미흡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개별 DB시스템을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14. 9.)
- 국민들은 하나로 통합된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일법제 관련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모두 검색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음



10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586)

그 동안은

- 기존 사회봉사명령은 일반 국민이 집행 분야 선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농촌일손돕기 분야 위주의 공급자 중심으로 집행하였음



이제는

정부 3.0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사회봉사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 국민으로부터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신청 받아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회봉사자를 투입하여 집행함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집행이 필요한 분야를 신청 받고,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심사한 후 집행하는 친서민,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정책 ('13. 5. 시행)

※ 주요 집행분야

벽화그리기 등 지역사회지원, 독거노인 목욕봉사 등 소외계층지원, 저소득가정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가뭄피해지역 등 긴급재난복구지원,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지역복지시설 지원, 각종 공익지원 등



여 백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이야기

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 우수사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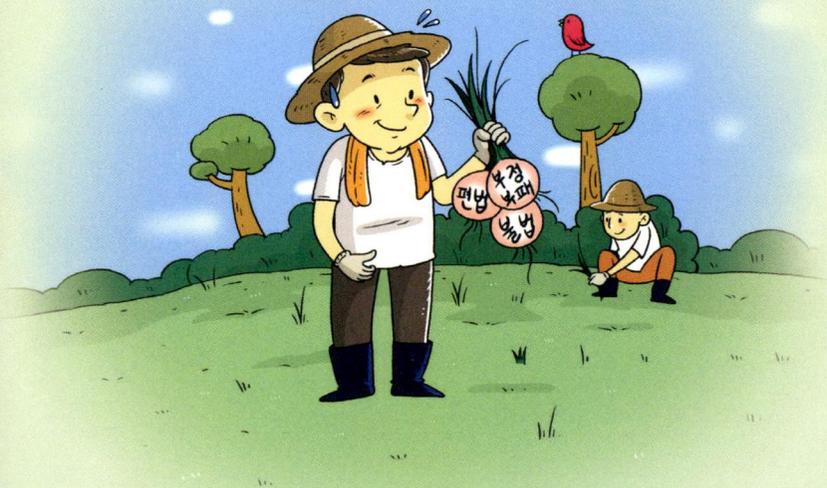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 우수사례 리스트

- 1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 2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 3 미납 추징금 환수
- 4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 5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 6 검사비위로 인한 불법 수익 박탈
- 7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 8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어 표출

비정상의 정상화란?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어젠다**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마당 <http://normal.go.kr>

01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768



비정상

- ▶ 파산 선고자에 대한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파산제도를 이용하고도 경제적 빈곤·사회적 고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임

* 파산선고 이후,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빈곤층·극빈곤층으로 전락(80% 이상), 사회적 냉대 경험(66%), 경제적 재기 실패(82.5%)



정상화

- ▶ 공익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파산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40개 법령(45개 조항) 개정을 추진 중임
- ▶ 법제 정비가 완료되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5만명과 면책불허가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3만명 등 파산자 8만명이 기존에 취업이 제한되었던 45개 직업에 새로이 종사할 수 있게 됨

02

공공기관 · 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271



비정상

-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재정적자 누적이 국가 전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원전비리·철도비리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정상화

- 공공기관 비리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관행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임
 - *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사범 170명, 안전관련 등 공공인프라 비리사범 87명 단속 ('15. 1.~9.)
- 매분기 '클린 피드백회의'를 개최하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임

03

미납 추징금 환수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552



비정상

▶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버티면 그만'이라는 추징금 납부 회피 관행이 지속됨



정상화

▶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범죄수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4. 11. 19)하여 검찰의 재산 추적수단 등을 강화함

* 미납 추징금 2,021건, 35,998백만원 추징 ('15.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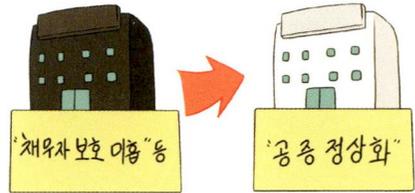
※ 주요 개정 사항

- ① 추징금 환수를 위한 영장 청구권,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권, 과세정보 제공 요청권 등 신설
- ②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가족,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범위 확대
- ③ 현재 추징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도 개정안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규정

04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법무부 법무과 02-2110-3180



비정상

- 공증분야에서 대부업체의 채무자 대리인인 채무자 보호가 미흡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공증인이 책임명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였음



정상화

- 공증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대부업체의 채무자 대리 방지를 위해 쌍방대리를 금지함
- 공증인이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증인의 책임명 (재인가)을 제한함

05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법무부 분류심사과 02-2110-3606



비정상

- 일부 사회물의를 사범이 가석방을 권리로 인식하거나 치료목적인 형집행정지자가 치료이외의 일탈행위를 하는 등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음



정상화

- 사회물의를 사범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지도층 등의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되, 특별히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가석방 허가여부를 심사함
 - * 제도개선으로 사회지도층 가석방 허가율 감소 : 41.2% → 4.4%
-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형집행정지 시 의뢰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함

06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법무부 검찰과 02-2110-4211



비정상

- 기존 검사징계법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금품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박탈할 수 없었음

※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일반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조항에 따라 금전적 이익의 5배까지 박탈



정상화

-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요구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07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271



비정상

- 공소장에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정상화

-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방지를 통해 보복범죄를 예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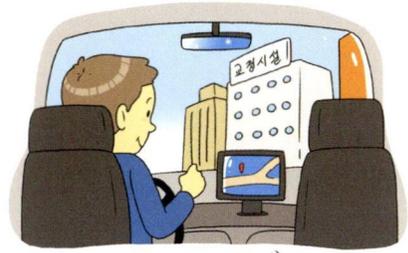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공소장 등의 기재방식을 변경하여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여 기재함
- 체포·구속 통지 시 첨부된 범죄사실 중 피해자 관련 사항을 삭제함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가명조서를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을 제출받도록 함

08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어 표출

법무부 보안과 02-2110-3383



“00교도소 앞 삼거리”

비정상

- 교정시설은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포털이나 내비게이션에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이 불편하였음



정상화

- 내비게이션에서 교정시설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주변 교차로 또는 버스정류장을 내비게이션에서 검색되도록 개선함
- 접견민원인 380여만 명 등 전국 52개 교정기관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이 증진됨

* 00교도소 앞 삼거리, 00구치소 앞 버스정류장 등으로 표출



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 2014년

분 야	과 제 명	소관부서
정부 정상화과제 (8개)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형사기획과
	미납 추징금 환수	국제형사과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법무과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분류심사과
	검사비위로 인한 불법 수익 박탈	검찰과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	이민조사과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형사기획과
	안전사고관련 처벌법규 미비사항 점검	형사법제과
자체 정상화과제 (9개)	외국인 소유 차량의 '대포차' 악용 방지 대책	외국인정책과
	변호사의 수임신고 누락 관행 개선	법무과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상사법무과
	협동조합 등 선거 관련 법령 개정 검토	통일법무과
	과태료 고액·삼승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 강화	법무심의관실
	차명법인 정상화	형사기획과
	국가소송사건의 법률구조대상사건 제한 폐지	인권구조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제외 가석방자에 대한 국내외 여행 허가제도 개선	분류심사과

• 2015년

분 야	과 제 명	소관부서
정부 정상화과제 (5개)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상사법무과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형사기획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형사기획과
	미납 추징금 환수	국제형사과
	관공서 난동·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형사기획과
자체 정상화과제 (16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 강화	법무심의관실
	차명법인 정상화	형사기획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제외 가석방자에 대한 국내외 여행 허가제도 개선	분류심사과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법무과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개선	분류심사과
	검사비위로 인한 불법 수익 박탈	검찰과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	이민조사과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형사기획과
	인전사고 관련 처벌법규 미비사항 점검	형사법제과
	수형자 정역집행을 제고	직업훈련과
	입국불허 후 송환불응자 처리방안 마련	출입국심사과
	공공단체의 법률고문 자격제한 개선	정부법무공단
	법조브로커 근절로 법률시장 투명성 제고	법무과
	회생절차 남용 방지	상사법무과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어 표출	보안과

여 백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개혁 이야기

법무부 규제개혁 사례 모음



Table of Contents

규제개선 사례 리스트

연번	규제개선 특 제 목	소관	시행일
I. 국민불편 해소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고용변동신고 한번으로 OK!	체류관리과	'14. 06. 30. '14. 11. 13.
2	외국인도 국내교육기관에서 영어 등 외국어연수 허용!	체류관리과	'14. 10. 28.
3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 제도 폐지! 주민등록으로 개선	체류관리과	'15. 01. 22.
4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장애인 등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및 심사절차 간소화	국적과	'15. 05. 30.
5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 요건 중 부동산 평가 방법 개선	이민통합과	'15. 06. 15.
6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우편으로 체류민원 접수!	체류관리과	'15. 08. 01.
7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이민정보과	'15. 10. 01.
II. 기업활력 촉진			
8	전문 외국인 번역사 고용관련 요건 완화	체류관리과	'15. 02. 27.
9	외국인 여행상품 개발자 고용관련 요건 완화	체류관리과	'15. 03. 06.
10	외국인 고용 허용비용 확대	체류관리과	'15. 07. 01.
11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도모	상사법무과	'15. 07. 01.
12	해외기술전문학교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허용 확대	체류관리과	'15. 07. 01.
13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체류관리과	'15. 07. 06.
14	APEC 기업인여행카드 발급요건 완화	출입국심사과	'15. 09. 01.
15	'경량항공기' 통한 자금유통(저당권의 대상물)으로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	법무심의관실	'15. 11. 19.
III.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16	유학생에 대한 영주(F-5)자격 취득 대상 확대	체류관리과	'15. 02. 10.
17	유학생에 대한 취업(E-7) 및 구직(D-10)자격 취득 요건 완화	체류관리과	'15. 02. 10.
18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F-5)자격 부여 점수제 도입	체류관리과	'15. 06. 01.
19	점수미인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자격 변경시 체류기간 상한 확대	체류관리과	'15. 06. 15.
IV. 관광활성화 기여			
20	중국 및 동남아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	체류관리과	'15. 04. 20.
21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체류관리과	'15. 07. 06.
22	환승관광 무비자입국허가 제도 더욱 더 확대!	출입국심사과	'14. 09. 15. '15. 06. 01.

01 | 국민 불편 해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고용변동신고 한번으로 OK!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4. 06. 30. / 2014. 11. 13.

개선 전

- (고용신고) 외국인 근로자(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 신고(10일 이내)를,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14일 이내)를 각각 해야 함
- (고용변동신고)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를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의 퇴직' 등 고용변동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부(고용지원센터) 양 기관에 신고

개선 후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



01 | 국민 불편 해소

외국인도 국내교육기관에서 영어 등 외국어연수 허용!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4. 1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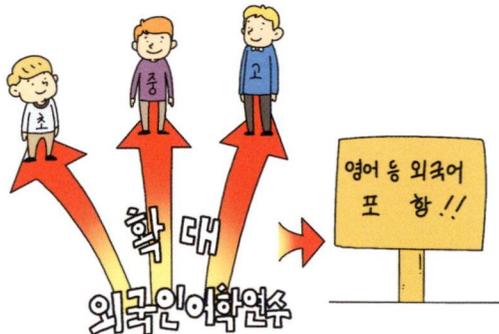
개선 전

-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만 가능
 - 고등학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해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만 허용



개선 후

- 국내 외국인어학연수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확대
- 연수 범위도 한국어 이외에 영어 등 외국어를 포함하도록 개선
 - 📌 중국 등 주변국의 언어연수 수요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제도 폐지! 주민등록으로 개선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1. 22.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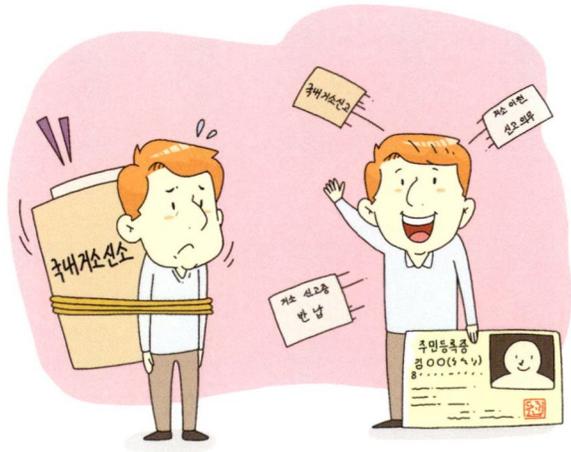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신고증 반납 등을 하도록 하여 불편



개선 후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시행

💡 재외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



01 | 국민 불편 해소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장애인 등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및 심사절차 간소화

소 관 :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시행일 : 2015. 05. 30.

개선 전

•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 독립 · 국가유공자 본인 • 독립 · 국가유공자 직계존비속
- 독립 · 국가유공자 배우자 • 우수인재에 한해 수수료 면제

개선 후

•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① 독립 · 국가유공자의 본인,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국적 회복 신청수수료도 면제)
- ② 독립 · 국가유공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도 면제)
- ③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⑤ 지적 · 정신 · 뇌병변 장애인 3급, 자폐성 장애인 2급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
-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에 대한 귀화심사절차 간소화 (신설)

- 지적 · 정신 · 뇌병변 3급 또는 자폐성 2급 장애인이 부모와 동거하거나(특별귀화 대상자) 한국인 배우자와 동거(결혼 이민자)하고 있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장실태조사로 확인된 경우 면접심사 생략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 요건 중 부동산 평가 방법 개선

소 관 : 법무부 이민통합과 (02-2110-4143)

시행일 : 2015. 06. 15.

개선 전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재 함



개선 후

- 초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서류 작성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재 하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소득요건이 시행된 '14년 4월부터~'15년 9월까지 결혼이민 사증 신청자 기준 1만3천3백여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01 | 국민 불편 해소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우편으로 체류민원 접수!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8. 01.

개선 전

-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꼬박 1일 이상 소비해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후

-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 해소 기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소 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3)

시행일 : 2015. 10. 01.

개선 전

- 외국인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로 인하여 출입국기록이 생성되는 입국일 다음날이 되어야 휴대폰 개통 가능

* 휴대폰 개통 신청 외국인의 성명이 출입국기록상 성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출입국기록 생성에 1일이 소요되어 입국 당일에는 휴대폰 개통 불가



개선 후

- 실명인증서비스에 출입국기록이 아닌 입국심사로그*를 활용함으로써 입국 즉시 개통! 외국인이 입국 즉시 휴대폰을 개통 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입국심사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원시정보로 출입국기록은 로그정보를 정제하여 생성됨

입국 즉시 개통!



02 | 기업활력 촉진

● 전문 외국인 번역사 고용관련 요건 완화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2. 27.

개선 전

- 플랜트 공사 분야 전문 외국인 번역사를 1명 고용하려면 5명의 국민고용 필요



개선 후

-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는 특수전문분야 번역가·통역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내국인 고용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의무고용비율 완화로 특수전문번역 업체 부담완화



외국인 여행상품 개발자 고용관련 요건 완화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3. 06.

개선 전

- 외국인 여행상품 개발자를 고용하려면 연평균 3,0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필요



개선 후

-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로 기준 완화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내국인 의무고용비율 완화로 우수여행상품개발 및 신생 여행업체 부담 완화



02 | 기업활력 촉진

외국인 고용 허용비율 확대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7. 01.

개선 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 초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



* 예시) 내국인(국민) 고용이 10명이면 외국인 고용은 2명까지만 허용

개선 후

- 제조 · 무역 · 컨설팅 · R&D 등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적용을 유예(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고용을 허용)

🌸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비율 적용을 유예하여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 기대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도모

소 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759)

시행일 : 2015. 07. 01.

개선 전

- 회생절차 과정에 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 개최, 회계법인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 필요

*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



개선 후

-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임의화 및 관계인설명회 신설
-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가능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추가하여 그 요건을 완화

💡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



02 | 기업활력 촉진

● 해외기술전문학교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허용 확대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7. 01.

개선 전

- 디자인, S/W, 뷰티 등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가 국내 진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의 고급인력이 기술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

* 외국인 강사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대학초빙강사(E-1) 및 어학강사(E-2)만 가능하여 외국 기술전문학교는 국내 대학교와 비영리 협업 형태로 운영 중



개선 후

- 강의를 목적으로 한 기술 전문학교 외국 강사진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허용

🌸 내국인들도 외국전문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7. 06.

개선 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
- 투자 관계자 등이 단기비자 발급시 필요한 제출 서류가 복잡



개선 후

- 새만금 경험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비율을 30%까지 허용
- 투자업체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예비투자자에게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02 | 기업활력 촉진

APEC 기업인여행카드 발급요건 완화

소 관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3)

시행일 : 2015. 9. 1.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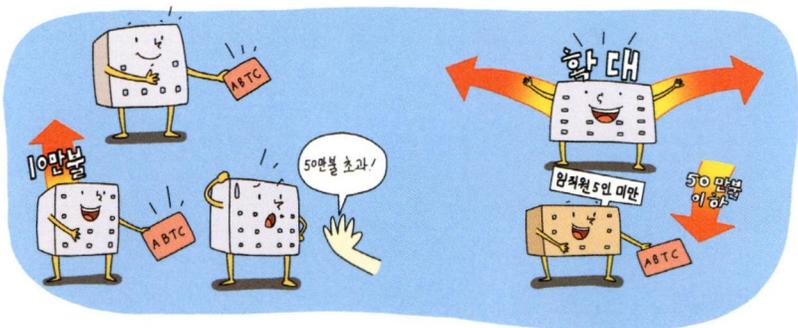
- 연간 수출입실적이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는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임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의 경우 연간 수출입 실적이 50만 불을 초과하여야 ABTC 발급 가능

*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인들은 비자 없이 ABTC(APEC Business Travelers' Card)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 수행에 있어 시간과 경비 절감 가능

개선 후

- 임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의 ABTC 발급을 위한 수출입실적 기준을 50만불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좀 더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ABTC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BTC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 제918호)」개정 완료

* '15. 9월 기준 유효카드 수 : 24,983매



‘경량항공기’를 통한 자금유통(저당권의 대상물)으로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

소 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2)

시행일 : 2015. 11. 19.

개선 전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은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만을 저당권의 대상물로 규정



개선 후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개정을 통해,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 등) 및 그 밖의 항공기(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까지로 저당권 설정가능 객체 확대

💡 ‘경량항공기’ 등에도 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 기대



03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유학생에 대한 영주(F-5)자격 취득 대상 확대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2. 10.

개선 전

-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 이상자에 대해 국내 3년 체류하고 연간소득이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영주자격 부여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개선 후

- 영주자격 요건 중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공분야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공계로 확대하고, 석사 학위 취득자는 전공분야 제한 폐지

💡 우수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 대상 확대로 글로벌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유학생에 대한 취업(E-7) 및 구직(D-10)자격 취득 요건 완화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2. 10.

개선 전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E-7)요건
 - 학사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학사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밀접한 관련성과 함께 평균학점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구직비자(D-10) 요건
 -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학사는 평균학점 3.0 미만 시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 필요
-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을 위한 구직비자(D-10)의 체류기간
 - 석·박사는 2년, 전문학사·학사는 1년을 한도로 구직비자 부여

개선 후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E-7)요건 완화
 - 학사의 경우 취업직종과의 전공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학사에 대해서는 학점과 자격증 요건 폐지 (전공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구직비자(D-10) 요건 완화
 - 학점, 국가기술자격증, 지도 교수 등의 추천서 폐지
-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을 위한 구직비자(D-10)의 체류기간 확대
 -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학사(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 및 학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구직비자 부여



🌸 우수 외국인유학생 국내 정주여건 개선

03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F-5)자격 부여 점수제 도입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6. 01.

개선 전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영주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음



개선 후

-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점수제 도입 이후에는 해당 부처 장관의 추천이 필요없게 되었고, 연구실적, 기업근무경력, 지식재산권 보유, 소득, 학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다양화하여 우수 인재 적극 유치



점수이민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자격 변경시 체류기간 상한 확대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6. 15.

개선 전

- 교수, 연구원 등이 거주(F-2)자격 취득 후에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이 종전보다 축소(교수, 연구원 등은 최대 5년이나 점수이민제는 3년)되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부담 증가



개선 후

- 거주(F-2)자격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확대
💡 우수인재 체류기간 상한 확대를 통한 국내 정주요건 완화 기대



04 | 관광활성화 기여

● 중국 및 동남아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4. 20.

개선 전

- 복수비자 유효기간을 단계별 (1년 → 3년 → 5년) 부여



개선 후

- 최초 복수비자 발급 시부터 유효기간을 한 번에 5년 부여
- 💡 비자를 자주 받지 않아도 되어 비자발급 부담 완화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소 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시행일 : 2015. 07. 06.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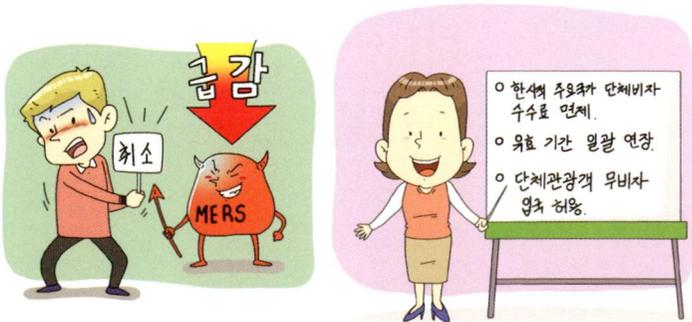
-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입국예정자가 관광을 취소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



개선 후

- '15.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인당 미화 15불 상당)
- 메르스 발생 전후기간('15. 3. 1.~'15. 6. 30.)동안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일괄 연장
- 일본 단체비자 및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 관광객을 위한 출입국편의 제공으로 외국인 관광객 점차 증가 예상



04 | 관광활성화 기여

환승관광 무비자입국허가 제도 더욱 더 확대!

소 관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6)

시행일 : 2014. 09. 15. / 2015. 06. 01.

개선 전

- ‘환승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인천공항, 김해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에서 실시

* 제주도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김해공항 등에 도착한 중국 단체관광객 및 제3국 환승객을 대상으로 7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



개선 후

- ‘환승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인천공항, 김해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에서 대구공항(14. 9. 15.), 김포공항(15. 6. 1.)으로 확대

※ 무비자입국 허용 내륙지역 체류기간을 72시간 → 120시간으로 확대

📍 무비자입국 관광객(15. 6월말 기준, 503,364명), 약 4,077억 원의 국내 소비 창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2015년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법무변화 이야기**

2015년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모음

■ **정부3.0 이야기**

법무부 정부3.0 우수사례 모음

■ **정상화 이야기**

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 우수사례 모음

■ **규제개혁 이야기**

법무부 규제개혁 사례 모음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법무부 기획조정실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 2110-3107

인쇄처 : 동광문화사 Tel: (02) 503-5165